

국권상실과 일본의 한반도 정책

전상숙*

I. 머리말

II. 러일전쟁 이후 황화론의 고조와 인종주의적 역발상, 아시아주의

III. 일본 육군의 북진대륙정책과 한국 병합

IV. 일본 대륙국가화의 '교두보', 한반도

V. 맺음말

일본의 근대화는 구미 제국주의 열강의 서구중심주의적 견제를 수반하였다.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에 대한 위기감이 '황화론'의 확산으로 표출되었다. 이에 대한 일본은 외교적 협조주의 강화와 함께 역으로 북진대륙정책을 변경하며 내실을 기하였다. 황화론과 구미 열강의 견제는 일본의 국가적 성장의 필요와 서양에 대한 동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황화론'과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일본을 맹주로 하는 '아시아주의'적 사상이 확산되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륙정책을 육군 중심의 '북진대륙정책'으로 전환하여 한국 '병합'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기본 구상은 일본의 국가적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대륙진출과 한국 지배의 필요를 역설하며 한국을 이익선으로 규정한 야마가타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방위라고 하는 군사적 견지에서 주권선 일본과 직결시킨 것이었다. 그 북진대륙정책에는 미묘한 대륙경영 방식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었다. 그 차이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병합한 한국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곧 식민지 조선총독부 지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조선지배와 직결된 중요한 것이었다.

주제어 : 러일전쟁, 아시아주의, 일본대륙정책, 한국병합, 황화론

*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 머리말

이 글은, 일본의 한국 '병합'을 근대 국가 일본의 국내외 정치·외교사적인 맥락에서 고찰하여, 일본의 한국 병합과 식민지배정책이 근대 일본 국가에서 갖는 정치적 의미와 목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는 곧 일본의 한국 병합의 목적과 식민지배정책의 특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일본의 '한국병합'을 일본 국가의 '제국주의적 근대기획'이라는 관점에서, 일본 국가이권의 확장을 위한 대륙정책과 그와 긴밀히 결부되어 진행된 외교정책의 변화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명치유신 이후 세계 자본주의체제가 중공업을 산업적 기반으로 하는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는 시기에 시작된 일본의 근대화는 선진 근대국가의 앞선 기술을 받아들여 급속히 성장하였다. 후발 산업 국가 일본은 영·미 중심의 선발 산업국가에 의존하는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근대 일본 국가의 성장을 담보할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여 구미 열강에 필적할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대륙정책을 추진하였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대외 침략'으로 현재화되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이르는 '식민지 획득 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제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제국화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구미 제국주의 열강의 서구중심주의의 위기감을 조성하여 일본에 대한 견제와 '황화론'의 확산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일본 정부는 국가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외교적 협조주의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대륙정책을 변경하였다.

구미 열강의 대일 견제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에서 나타나는 위의 양 측면은 상호 모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국가의 성장의 필요와 서양에 대한 동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자각함으로써 구미의 '황화론'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

던 '아시아주의'적 사상과 결합될 소지를 내포한 것이었다. 그것은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륙정책이 '북수남진'으로부터 육군 중심의 '북진대륙정책'으로 전환되어 박차가 가해진 한국 '병합'을 통해서 그 단초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 글은 이러한 제양상들을 유기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고찰하여 일본의 한국 '병합'과 식민지배정책이 근대 일본 국가에서 갖는 정치적인 의미와 목적을 재고하고자 한다. 필자는 일본의 한국 병합의 목적과 식민지배정책의 특질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러일전쟁 이후 1910년 일본의 한국 병합에 이르기 까지 일본 육군벌을 중심으로 한 대륙정책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구축된 조선총독정치체제에 대하여 고찰한 바 있다 (전상숙 2006; 전상숙 2009). 이 글은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한국 '병합'을, 근대 일본의 국가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된 일본 국내외 정치·외교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일본의 한국병합의 의미와 식민지 한국이 근대 국가 일본에 대하여 갖는 정치적인 의미와 목적을 재고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종래 분절적으로 고찰되었던 일본의 한국 병합과 식민지배정책사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¹⁾ 일본의 한국병합과 식민지배정책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정책의 성격과 특질을 명료히 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러한 연구가 일제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재고하는데 일조하여 궁극적으로 근·현대 한국사회를 유기적·연속적으로 고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기존 연구 검토는 전상숙(2006)과 전상숙(2009) 참조.

II. 러일전쟁 이후 '황화론'의 고조와 인종주의적 역발상, 아시아주의

주지하듯이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서 대륙진출의 장애로 적대시하던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퇴각시키고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독점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중화체제를 와해시키고 동아시아의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러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은 동아시아의 제국으로서 구미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인정받게 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동아시아의 섬나라 일본이 세계적인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이 되는 도약의 전환점이면서 동시에 대만과 한국을 거점으로 하여 '대륙국가화 기획'을 구현할 수 있게 된 장기간에 걸친 '식민지 획득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 의해 문호를 개방하고 뒤늦게 근대화를 시작한 일본이 10 여년 간에 동·서양의 강국과 치른 전쟁의 승리는 서구 열강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러일전쟁 이후 미국·영국·프랑스·태평양 연안의 영국 자치령, 청국 등에서는 일본이 러시아를 패퇴시킨 것을 서양 국가 세력을 극동에서 배제하려는 제일보로 보는 시각이 대두하였다. 또한 일본이 장차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진출한 프랑스와 필리핀에 진출한 미국을 공격할 것이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설이 유포되었다. 그리하여 네덜란드는 네덜란드령 인도에서 쫓겨나고 결국 일본은 청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개발하여 유럽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오카 요시타케 1996, 62).

일본의 근대화는 영·미와의 협조관계 속에서 그들에 의지하며 이루어졌다. 그러한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로 발전하는데 구미

열강이 공공연히 반대하지 않은 것은 일본을 그리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19세기 말 이래 일본의 근대화, 서양화 현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동서관계의 장래에 대한 심각한 그리고 때로는宿命론적인 의견이 대두하기도 하였다. 과학 기술의 진보가 아시아에도 영향을 끼쳐서 '잠자는 아시아'가 차차 공업화에 눈뜨고 있다고 여겨졌다. 그것은 아시아가 서양화된다면 종래의 서양 우위가 상실되지 않을까하는 불안함이 반영된 것이었다. 서양화한 아시아와 서양의 진정한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아시아는 서양화한 후에도 여전히 이질적인 문명이고, 반서양적일까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가운데 극단적인 비관론이 '황화론(黃禍論, Yellow Peril, Japanese Peril)으로 발전하였다. 황화론은 서양적인 정신문명을 가지지 않은 아시아인이 근대적 기술을 도입하여 표면적으로 서양화하여 아시아에서 서양의 우위를 타파하려 한다는 이미지에 근거한 일종의宿命론이었다. 이는 1890년 후반이후 꽤 일반화되어 있었다(이리에 아키라 1993, 56).

황화론은, 사회진화론과 결합되어 서구 열강이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자의적으로 인류를 인종에 따라 구별하고 평가하여 그에 기초해서 우월한 인종의 열등한 인종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한 인종주의 내지 인종학을(전복희 1996, 115) 배경으로 한 서구 우월주의가 일본의 대두를 보면서 형성된 불안함이 반영된 사회적 담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일본과의 전쟁에 패한 러시아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권희영 2006, 344; 이채문 1998, 231-232). 그러나 이 시기 이민 문제를 둘러싸고 형성되기 시작한 미·일간의 긴장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대한 배일운동(유기식 1997, 9-12), 황화론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일본정부가 예기치 못한 서구 우월주의의 정서적인 반발로써 일본정부에 담혹감과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황화론은 19세기말 이래의 현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을 계기로 미국 서해안에

서 '황화'로 표출된 미국에서의 배일운동은 일부 미국인의 행위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미국인의 문화적·인종적 편견과 세계관에서 유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일본정부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생활수준이 높은 백인과 생활수준이 낮은 동양인 중 어느 쪽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라는 세계적인 문제의 일부"라고 한 샌프란시스코의 한 신문보도와 같이 일본의 대두를 서양은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보고 있었다. 그와 결부된 황화론, 배일운동은 외교 안전으로써 미일전쟁론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Charles E. Neu 1967, 20-50; 이리에 아키라 1993, 30, 65-66; 오카 1996, p.63).

사실 황화론은 아시아의 서구화, 근대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것은 1890년대 일본이, 명치유신 이래 헌법 발표와 제국의회 개최 등 근대적 국내 정치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이익, 국력의 관점에서 일본의 발전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꾀하기 시작하던 시점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실상 1890년, 일본 육군을 창설한 초대 수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일본의 외교와 군사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여 '국가 독립 자위의 길'은 '주권선'과 '이익선'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는데 있다고 하였다(야마가타, 「外交政策論」, 大山梓 1966, 196-201). 주권선은 일본 영토를 지칭한 것이었다. 자국 영토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익선, 즉 본국 영토의 '안위와 상호 밀접하게 관계되는' 인근 지역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이익선을 '보호'하여 일본 본토의 안전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체였다. 그것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건설 착수가 임박한 시점에서 대러 견제책으로 제안된 것이었다. 러시아의 시베리아철도가 완성될 경우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침투가 활발해져 '조선의 독립'이 위협받게 되고 그러면 일본 쓰시마(對馬島) 제도의 주권선이 머리 위에 칼을 들이댄 것과 같은 위협을 당하는 형세가 될 것이므로 일본

의 독립을 완전히 하기 위해서 일치 노력해야 할 방책으로써 '조선의 독립' 방어를 제안한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제1회 제국 의회의 시정방침연설을 통해서 국책으로 정해졌다(야마가타, 「帝國の國是に就ての演說」, 大山樫 1966, 204-207). 그리고 1893년 군비의견서를 통해서 시베리아철도가 완성될 때 본격적으로 행해질 러시아 등 서구열강의 동양 침략에 대한 준비에 착수하였다(야마가타 1893. 10. 215-222).

일본이 국가의 발전이라는 적극적인 대외정책의 입장에서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며 '조선 독립'을 위해 치른 청일전쟁은 성공적이었다. 조약개정은 단순히 굴욕적인 조약을 철폐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국력의 기초로서 경제력을 충실히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이리에 1993, 35). 야마가타는 부산에서 의주를 관통하는 조선종관철도와 대련만에서 금주를 관통하는 요동반도철도를 부설하고자 했다. 그것은 장래 중국을 횡단하여 인도에 이르는 철도를 부설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청국 본토 진출계획이었다(고바야시 1996, 27). 그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은, 삼국간섭과 하문(厦門)점령의 실패로 열강에 대한 열세를 절감하는 가운데 구체화되어갔다. 삼국간섭 직후 일본은 1895년 군비확충의견서를 통해서 "동양의 맹주"가 될 것을 제창하고(야마가타 1895. 5. 15, 230) 군비의 충실을 본격화하였다. 그 결과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황화론의 고조는 아직 현실적으로 필요한 영미협조주의 외교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열강과의 정치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일본의 지위를 인정받아 소기의 성과를 이루려는 종래의 영미협조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하였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진출을 위한 군비확충을 피하였다. 일본은 대륙정책을 구미 열강과의 외교적 협조관계 속에서 조율해간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내 입각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가 구

미 열강의 눈치를 보는 듯한 영미협조주의 외교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을 비판하고, 동양의 단결을 강조하며 일본이 출선해서 아시아의 지도자가 되어 서양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였다. 1880년 흥아회(興亞會)가 결성된 이래 아시아 연대 주장은 계속된 것이었다. 그러나 청일전쟁을 경험한 후 흥아회가 1898년 동아동문회로 조직적으로 확대 병합된 이래 그것은 일본의 중국과 조선에 대한 강한 지도의식을 드러내며 정치화를 강력히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아시아연대주의는 유력한 정치가, 군인, 관료, 다수가 동아동문회에 참가하고 있을 정도로 주류 정치가와 군인 가운데에서도 확산되어가고 있었다(스벤 사아러 2008, 137-139).

그러한 흐름은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 연대해야 한다는 현양사나 민권파의 흐름, 흑룡회 등과 이합집산하며 '아시아주의'의 기초를 형성해갔다. 아시아주의(Asianism)이라는 말은 황화론 담론의 일부로서 이미 19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영어나 독일어의 출판물에서 등장한 Pan-Asianism(us)이라는 말로부터 연원한다(스벤 사아러 2008, 148 각주 44 참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아시아의 일국으로서 서양의 아시아 진출에 대항하여 아시아의 '각성'과 '아시아인의 아시아'를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일본을 맹주로 하여 아시아가 그 역사적 유산을 자각하여 서양사상의 영향으로 인한 혼미에서 벗어나 또다시 힘차게 세계 문명에 공헌할 수 있다는 생각이 고조되었다. 명치 정부가 조약 개정이나 전쟁을 통한 영토 문제 등에서 성과를 거둘수록 아시아주의적 사상을 지닌 사람들의 정부의 영미협조주의에 대한 반대와 비판이 강해졌다(이리에 아키라 1993, 42-56).

러일전쟁은 서구에서 황화론이 고조하는 것을 보며 일본인이 '백인'과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유색인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백인' 제국주의에 대한 '유색인종' 아시아의 연대와 그에 대한 지도의식을 강화하는 전환점이었다. 러일전쟁은 아시아주의자와

아시아 연대 사상에 중대한 기로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일각에서는 황화론보다도 '백화론(白禍論)'이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일본을 맹주로 한 아시아주의 사상이 확산되고 있었다(스벤 사아러 2008, 139-140).

그러한 아시아주의는, 박말명치초 정한론(征韓論)의 계보를 잇는 '주권선' 일본과 직결된 '이익선' 조선 논리를 서구 제국주의의 인종론에 기초하여 뒷받침한 '일선동조(日鮮同祖)'·'내선일여(內鮮一如)' 논리가 개발되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의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침략의 논리로 발전해 가게 되었다.²⁾ 명치 초 일본에 도입된 인종론은(Peter Duus 1995, 414) 1886년 동경인류학회 창설을 통해서 일본인의 일본 인종에 대한 연구로 활성화되었다. 일본의 일본인종에 대한 연구는 일본인종이 여러 인종이 혼합된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며 조선인이 일본인과 같은 인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본인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여 일선동조론, 곧 침략의 논리로 일본인종의 다인종성을 전환시켰다(오쿠마 1995, 73-79). 구미에서 일본에 대한 황화론이 횡행하던 시기 일본에서는 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선동조·내선일여 등등의 의론이 횡행하였다(나카즈카 1993, 92).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맹주로서의 일본을 지향하는 아시아 연대주의·아시아주의가 확산, 강화되고 있었다. 일본의 대륙진출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구미에서 인종론은 백인종과 유색인종과의 차이를 차별화의 논리로 정립하여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활용되었다. 반면에, 일본에서 받아들여진 인종론은 일선동조론으로부터 비롯하여 일본인이 그들과 같은 피부 빛과 모양을 갖고 있는 아

2) 아시아주의와 일선동조. 나아가 '대동아' 논리의 지배정책적, 이데올로기적인 내용과 의미는 일본 국가 발전의 조작적 이념과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복합적 상관관계 속에 별도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시아인과의 동질성을 결합하는 논리로 재정립되어 아시아 일본의 아시아 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아시아주의 논의로 발전해갔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인종론의 침략론으로의 전환은 아이러니하게도 구미에서 인종주의에 기초한 황화론이 고조되어 일본 정부가 현실주의적인 영미협조주의 전략을 고수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황화론이 인종주의적 편견과 서구 우월주의에 입각한 백인의 일본 대두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아시아주의 대두와 침략론으로의 전환은 구미와의 협조·의존관계 속에서 일본국가의 발전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섬나라 후발자본주의 국가 일본의 열세를 극복하고 강대국 열강의 일원이 되고 싶은 일본 사회의 총체적인 열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황화론과 아시아주의는 그 백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양자는 모두 패권의 목적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동양과 서양이 상호 대등한 측면에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종래의 차이와 그에 따른 관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황화론은 서구 중심적 우월주의에 입각하여 그들과는 전혀 다른 동양의 섬나라 일본이 그들과 같은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을 견제하고 그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패권의 논리를 표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주의 또한 근대화를 통하여 발전한 인종적으로 다른 서양의 존재와 차이를 대자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서구적 근대화가 동반한 예측성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하여 구미 국가와 같은 열강의 일원으로써 동양의 맹주가 되고자 한 일본의 제국주의적인 패권의 논리를 표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일본의 아시아주의는 서구에 대한 도전의 논리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에 대한 지배와 패권의 논리였다고 하겠다. 또한 이 점에서 일본 정부와 민간사회는 비록 현실의 외교적인 입장의 차이를 표출하기는 했어도, 총체적으로 그 지향을 같이 하고 있었다. 국가적인 발전 방략의 모색이 국가와 민간사회 양 측에서 모두 서양과의 차

이와 격차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구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러일전쟁이후 구미에서 황화론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 그 인종주의적 역발상이라 할 수 있는 아시아주의가 침략의 논리로 전환된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III. 일본 육군의 복진대륙정책과 한국 병합

근대적인 국내 정치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일본이 국가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꾀하기 시작할 때 아마가타는 1890년 주권선-이익선 논리를 주창하여 한국에 대한 배타적인 영향력 확보를 국책으로 결정하였다. 막말 명치 초의 정한론으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문제에 대한 일본에서의 의견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반도 한국이 섬나라 일본에 대해 갖는 군사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있었다. 즉 동해-쓰시마해협-황해를 합하여 한국과 그 주변이 제3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은 일본의 안전상 꼭 피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 입장이었다(이리에 1993, 37). 아마가타가의 이익선론을 통해서 “조선의 독립” 방어·“조선을 보호”한다고 한 것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국과 새로이 침투해오고 있는 러시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인 주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여 주권선 일본의 독립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일본 국방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었다. 반도 한국, 이익선의 보호는 군사상의 의미에서 한국을 주권선 일본의 방위와 직결시킨 것이었다(전상숙 2006, 122). 이를 국책으로 결의하고 군비를 확충하며 치분 청일전쟁으로 일본은 대만을 편입하게 되어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열강에 앞서 제국주의적 중국 분할의 첫 발을 내딛고 한국의 지

배권을 둘러싼 사활적인 대러 투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삼국간섭을 통해서 조선지배를 위한 군사상의 필요에서 짐거한 요동반도를 박탈하고 병성황후 세력과 결탁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진출해옴으로써 일본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 본토 진출 구상을 갖고 있던 일본은 국제체제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열강의 제국주의적 패권으로 인한 '굴욕'과 제국주의의 장벽을 절감해야 했고 한국 정책도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북쪽에서의 대륙정책을 억제하고 국력 배양에 주력하면서 열강의 중국분할시 편승하여 남쪽 복건성(福建省)으로 진출할 준비를 해놓는다는 북수남진(北守南進)·중국분할편승론이 형성되었다(고바야시 1996, 28, 95-96).

그러나 의화단사건과 이를 기회로 한 하문(廈門)출병사건은 일본 내 권력관계와 대륙정책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의화단사건지 지리적 조건상 북경에 신속히 대규모 병력 출병이 가능했던 일본은 사건 진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때 일본은 열강의 관심이 북경에 집중해 있는 것을 틈타 복건성을 세력 하에 두고자 하문점령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영국을 필두로 한 열강의 철병 요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극동의 헌병', '구미 열강의 주구'라는 불명예만 얻었다(고바야시 1996, 38-39). 이 경험은 일본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대륙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의화단 진압의 주력으로써 열강의 이권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은커녕 '극동의 헌병' 정도로 취급될 뿐 열강의 일원으로서 이권분할에 동참하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지리적 편의와 군사적 독점만으로는 아직 열강과 겨룰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한편으로 극동의 헌병에 만족해야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이노우에 1975, 54-60).

이 사건으로 북쪽으로는 한국을 놓고 러시아와 타협하고 남

쪽으로 북진성 방면에 세력권을 확보하여 열강에 편승해 중국분토로 이권을 확장해 가려던 북수남진·중국분할편승론의 유효성이 급속히 상실되었다. 또한 열강과의 동맹의 필요에서 영일동맹이 추진되는 한편으로, 이를 놓고 만주와 한국에 이권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표출되어 대립하게 되었다. 영국과의 동맹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동맹 추진세력은 러시아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반대 측은 일본의 전력을 감안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피하고 대러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는 곧 의화단사건을 통해서 열강과의 동맹과 적극적인 북진 대륙정책의 필요를 절감한 야마가타 그룹과 이토(伊藤博文)세력 간의 대립이었다. 결국 1902년 영일동맹이 성사되었다. 이로써 이토가 입헌정우회를 창립하면서 시작된 '반(反) 정당' 야마가타와의 대립(마츠시타 1967, 331-37)은 야마가타의 승리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다.

이토와 야마가타를 정점으로 한 두 세력 간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영일동맹의 체결은 야마가타의 비호 아래 육군대신을 역임한 카츠라(桂太郎)내각이 들어서면서 급진전되어 이루어졌다. 입헌정치의 진전을 수용하려는 이토에 반하여 정당을 혐오하는 야마가타는 일본 육군을 창설하고 초대 육군대신을 역임한, 군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마스미 1992, 199-200; 이노우에 1975, 45-46). 카츠라는 그의 비호 아래 군제를 개혁하고 4내각의 육군대신을 역임하며 야마가타에 이어 두 번째로 군인 수상이 된 인물로 청일전쟁 이후 특히 발언권이 강화된 육군, 요수벌(長州閥)의 지도자였다. 군사적 방위의 차원에서 이익선 논리를 국책으로 정하고 성공적으로 치른 청일전쟁 이후 군벌의 위세는 마치 제국의 운명을 어깨에 진 듯 높아졌다(이노우에 1975, 50). 대륙 한국에서 치러진 청일전쟁의 결과 자연히 논공행상에서 문관에 비해 무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가운데서도 육군이 해군에 비

하여 4배 이상을 수여하였다(마츠시타 1967, 239-41). 그리하여 군벌 중에서도 육군의 정치적 발언력이 높아갔다. 군벌은 봉수권의 독립과 대신무관제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하문출병사건은 그러한 군벌이 대만총독부와 주도해서 행한 것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체결된 영일동맹은 열강과 동맹의 필요를 절감한 일본이 대러 견제의 공동 목표를 갖는 영국에 힘입어 적극적인 북진대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초석을 놓은 것이 야마가타였다. 그리고 그 초석에 입각하여 의지를 관철시킨 것이 카츠라였다. 그들에 의해 영일동맹의 체결로 육주해종(陸主海從) 대륙정책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바야시 1996, 55). 영일동맹의 체결은 요슈별 육군 군부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확고히 하고 적극적으로 '북진대륙정책' 의지를 천명한 것이면서 동시에 야마가타 그룹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되었다(전상숙 2006, 126-127). 그 북진 대륙정책은 1902년 카츠라 내각에 카츠라의 뒤를 잇는 요슈별 육군대신 테라우치(寺內正毅)가 입각함으로써 정치와 군사가 일치하여 적극 추진되었다.

만주와 한국문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전운이 감돌던 때 육군대신으로 입각한 테라우치는, 의회의 비협조로 재원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던 군비확충문제를 용지정리 단행, 병기탄약조제 사업 조정 등으로 해결하며 1903년 6월 어전회의에서 대리협상의 원칙, 개전을 결의할³⁾ 이끌었다(쿠로다 1920, 238-242). 카츠라 내각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한국을 완전히 확보하여 북진대륙진출의 거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결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9회 제국의회에서 개전 반대가 예상외로 강력하자 의회를 해산하고, 내각 단독으로 제정상 긴급처분으로 군비충실에 필요

3) 당시 대러 개전론자들의 개전 결의 활동에 대해서는 마츠시타(1967), pp.351-353 참조.

한 경비와 경부선 철도 속성 공사 보조금 지출을 의결하고 이를 위한 국구 채권의 발행을 칙령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테라우치 육군대신은 새로운 군사 최고 기관인 군사참의원을 개설하고 전 시 대본영 조례를 수정하여 참모총장과 해군 군사령부장을 각 막료장(幕僚長)으로 하는 육군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경부선 철도의 속성을 독려해 군로가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쟁 수행 준비의 만반을 기하였다(쿠로다 1920, 241-254; 전상숙 2006, 128-129).

그 결과 러일전쟁은 해군을 제외하면, 수상을 비롯해서 육군 대신, 야마가타 참모총장, 만주군 참모총장 코다마(兒玉源太郎) 등 야마가타 그룹의 요슈별 육군 군부가 중심이 되어 수행되었다(키타오카 1978, 61; 마츠시타 1967, 353-356). 그 승리로 육군대신 테라우치를 중심으로 한 요슈별 육군 군부의 결속력과 정치적 발언력이 일층 고조되었다. 명실공히 요슈별 출신 육군 지도자를 수반으로 한 정부가 대륙의지를 천명하고, 그 지도부가 총동원하여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정치적 위상과 발언권을 높여간 것이다. 이후 이들 육군 중심의 적극적인 북진 대륙정책이 본격화되었다(전상숙 2006, 129-130).

1890년 야마가타가 이익선 논리로 한국 '보호'를 국책으로 결의한 이래 그것은 요슈별 육군의 지상과제였다. 러일 개전 직후부터 전세를 유리하게 이끈 일본은 1904년 5월 30일 한국의 '보호국화'를 결의한 "대한(對韓)방침"을 결정하였다(「對韓方針に關する決定」, 外務省 편 1965, 224-28). 7월, 고무라(小村)외상은 "이 기회에 만주와 한국 및 연해주 방면의 이권을 확장해 국력의 발전을 꾀할 것"을 전쟁 강화의 방침을 밝혔다(「露日戰爭の講和條約に關する小村外務大臣の意見」, 外務省 편 1965, 228-29). 그리고 1904년 8월 일본은 한국에 '고문정치'를 단행하였고, 러일 전쟁에 승리하자 한국을 보호국화 하였다(전상숙 2006, 132). 이로써 1890년 이래 일본 국가의 적극적 발전을 위하여 결의된 이

익선 논리의 지상 목적이었던 '조선의 보호', 곧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 지배권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이 달성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곧이어 한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삼각지대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한국과 중국 사이에 영유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만주를 둘러싼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게 된 간도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그곳에 장래 중국 이권을 위한 거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06년 3월 간도를 실지 조사한 한국주차군참모부는 "공세를 취해 북만(北滿) 방면에서 길림지방으로 진출하려면 우선 간도를 점령해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육군성과 외무성에 제출하였다(韓國駐劄軍參謀部, 1906. 3. 「間道二關スル調査概要」), 그리고 육군은 간도 지역의 확보가 일본의 안보상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지역을 확보할 방침을 결정한 '1906년도 일본 제국군대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면까지 고려한 장춘-길림 간 철도연장이 포함되어 있었다(日本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部, 1967. 162), 그리고 육군대신 테라우치는 1906년 6월 남만주철도주식회사설립조령을 발표한 후 직접 7월에 설립위원장이 되어, 1907년 1월 철도회의 의장을 역임하며 기존의 장춘-길림 사이의 철도부설 계획을 수정해서 한국 북부와 연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쿠로다 1920, 442-44). 그리고 러일협약 공포 직후 8월 19일 간도 용정촌에 한인 보호를 명분으로 '통감부간도임시파출소'를 개설하였다.

이는 한국의 보호국화로 독점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여긴 일본이 영일동맹을 체결하며 전환한 육군 중심 북진 대륙정책의 일환이었다. 만주와 직결된 간도 지역을 확보하여 근대 일본 국가의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이권의 팽창을 꾀한 것이었다. 그러한 육군의 북진 대륙진출 계획은 1907년 4월 최고 국책으로 결정된 '일본제국 국방방침'으로 확정되었다. 이 국방방침은 육군 참모본부의 조슈벌 육군대장 다나카(田中義一)가 러일전쟁을

통해서 배운 교훈과 전후 채택해야 할 정책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테라우치와 야마가타가 공감하여 야마가타의 수정을 거쳐 결의된 것이었다(키타오카 1978, 9; 모리야마 1987, 228-29). 다나카는 영일동맹이 체결되자 영·일 해군세력에 대적할만한 해군은 더 극동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육군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다카쿠라 1981, 211-212). 국방방침 입안 시 그는 일본이 '섬나라'의 한계를 벗어나 '대륙 국가'가 되어 국운을 크게 신장해야 한다는 신조를 갖고 있었다(이리에 1993, 63). 제국국방방침은 그러한 다나카의 생각에 공감한 쇼슈별 육군 야마가타 세력이 일본의 북방 대륙국가화를 결정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제국국방방침은 러일전쟁의 승리로 막말 이래 최대의 과제였던 국가적 독립을 달성했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국가 목표를 모색해야만 했던 일본이 그 새로운 국방정책의 기본방침을 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본의 '전후경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제국 국방방침'은,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함대의 대패(大敗)로 해군에 유력한 가상(假想)의 적이 없었던데 반해서 한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만주에서의 권익 확대로 안보상 중요성이 더욱 확장된 육군이 그 역할을 강조하며 국방방침의 주도권을 확정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영일동맹의 체결로 전환된 육주해종의 북진대륙정책, 육군을 주력으로 하고 해군을 보조자로 한 통일적 국방정책이 육군 주도 하에 수립되어 국책으로 결정된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육군은, 해군이 제창했던 수세(守勢)국방론·도제(島帝)국방론을 부정·극복하고 공세(攻勢)국방론·대륙제국론을 관철시킨 것이었다. '일본제국 국방방침'의 결정은, 육군이 만주와 한국에서의 권익을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하는 대륙국가 일본제국의 발전과 이를 위해 필요한 공세국방정책 추진을 결의한 것이었다(키타오카 1978, 9-13). 일본의 북진 대륙국가화, 대륙국가 제국일본이, 육군에 의해 새로운 국가목표로 제창, 결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영

일동맹을 통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적극적인 북진 대륙정책의 의지를 천명한 조슈벌 육군 군부의 계획도 국책상, 제도상으로 강력하게 보장받게 되었다(이노우에 1975, 74-76; 전상숙 2006, 135-136). 여기서 한국은 육군의 대륙국가화, 북진 대륙정책의 기축이 되는 만주와 불가분의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한국의 확보가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었다.

동북아 특히 만주를 둘러싼 열강의 이권 개입이 첨예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1907년 8월 15일 일본은 제1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여 간도를 포함한 남만주 이권과 한국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저지하고 제2의 러일전쟁의 위기도 해소하였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최문형 2004, 352-65) 러일전쟁 이후 큰 문제의 하나였던 러시아의 복수전에 대한 대비가 일단락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과 만주에 대한 권익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최대 당면과제가 되었다.

북진 대륙국가화 구상의 첫 단계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인 지배권 확립은 1908년 7월 제2차 카츠라내각이 들어서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직접적인 계기는, 중국이 1909년 3월 22일 간도 문제를 비롯한 일본과의 문제를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고 통고한 것이었다. 청일전쟁 직후 삼국간섭으로 외교적 굴욕뿐만 아니라 대한정책마저 후퇴해야 했던 일본은 그때와 같은 외교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여겼다. 당시 국제정세가 “열강이 하나같이 적이 되려한다”고 판단한 야마가타는 그러한 정세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여, 열강이 개입하게 되면 아직 완전히 “부용(附庸)”되지 않은 한국을 “또 다시” 포기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야마가타, 『第二對清政策』, 大山樺 編 1966, 312-14). 그리하여 카츠라 수상과 고무라 외상에게 일본이 처한 국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촉구하였다. 이는 곧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확보의 위기감과 필요를 역설한 것이었다(모리야마 1985,

82-85; 전상숙 2006, 136-137).

당시 이미 '자치육성정책'을 지향했던 초대 통감 이토가 한국 조야의 강력한 저항에 좌절하여 신속한 병합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고종황제를 양위시킨 후 제3차 한일협약(1907. 7. 24)을 체결하여 한국 내정을 실질적인 식민지 화하고 통감직 사의를 표명해 놓은 상황이었다(모리야마 1985, 79-80; 모리야마 1992, 175). 1909년 4월 카츠라 수상, 외무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郎), 이토 통감, 3인이 만나 한국의 병합과 이토의 사직을 결정하였다(고무라 1920, 8-17; 도쿠토미 1917, 460). 5월 30일 카츠라수상은 육군대신 테라우치를 제3대 한국통감으로 발령하였다(아마모토 1980, 498). 제2차 카츠라내각에서 사이토해상과 함께 유입되어 임시외상을 겸하며 부총리가 된 테라우치는 동아의 정세를 잘 알고 있어서 대(對) 중국 정책이나 만주경영에 대해서는 항상 각의를 주도하였다. 특히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선각자와도 같았다(쿠로다 1920, 441-442). 게다가 러일전쟁기 테라우치가 육군대신으로써 보여준 과단성이 높이 평가되어 병합 국책을 실행할 적임자로 여겨졌다(도키오 1926, 701).

육군대신에게 통감을 겸임케 하는 무리를 한 것은, 이번 기회에 한국병합을 완료하여 한국을 식민지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북진대륙정책의 기지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북진, 대륙으로 진출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도키오 1926, 538; 우미노 2004, 202). 제3대 통감 테라우치는 한국병합을 주도할 야마가타그룹 조슈벌 육군 군부가 도모해온 북진대륙정책의 책임자였던 것이었다. 테라우치의 한국통감 임명은 러시아와 영국으로부터 병합에 대한 승인을 얻는 것과 병행되었다. 테라우치의 통감임명으로 일본은 한국병합에 필요한 내외의 조건을 갖추었던 것이다(전상숙 2006, 139-140).

이와 동시에 1909년 6월 3일 내각회의에서 병합 후 한국 시정 방침이 결정되었고, 7월 6일 내각회의에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

병합을 단행"하기로 한국병합방침을 공식 결정한 후 천황의 재가를 받았다(「朝鮮併合ニ關スル件」, 外務省 1965, 340). 7월 8일에는 병합조약안이 결정되었다. 한국 병합의 "적당한 시기"는 통감 사임 후 한국병합을 적극 지원하던 이토의 암살로 한국병합의 여론이 조성되면서 결정되었다. 한국병합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테라우치는(쿠로다 1920, 569) 부임하기에 앞서 한국문제에 대한 각종 조사·입안을 준비하여, 헌병과 경찰을 일원화시켜서 한국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병합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병합 후 통치방침을 준비하였다(쿠로다 1920, 569; 도키오 1926, 539-543). 이러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테라우치가 수립해 놓은 통치 방침, 곧 천황대권에 의한 통치, 천황에 직예한 총독의 정무 통괄, 대권의 위임에 따른 총독의 제령권 및 명령권(「韓國に對する施政方針」, 外務省, 1965, 336; 「合併後半島統治と帝國憲法との關係」, 山本四郎, 1984, 63-70) 등은 병합 후 그대로 실시되었다.

그와 같이 시정방침을 정하여 내각의 결의를 이끌어낸 테라우치는 7월 23일 한국으로 와(야마베 겐타로 1971, 3), 8월 22일 이완용과 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테라우치와 이완용 사이에서 조인된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은 병합의 목적이 "특수하게 친밀한 관계를 생각해 상호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韓國併合に關する條約」, 外務省, 1965, 340). 또한 병합 공포 당일 재가된 일본 천황의 '병합조서'에는 '화란(禍亂)'의 연원인 한국의 치안이 보호정치로는 안정되지 않아 병합을 단행한다고 하였다(詔書「韓國ヲ帝國ニ併合ノ件」, 1910. 8. 29. 朝鮮總督府 1912. 附錄, 1). 같은 날 카츠라수상과 고무라외상도 각각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극동 화근의 근원이기 때문에 병합한다고 밝혔다(도키오, 1926, 624-627).

일본의 한국병합은 주권선 일본 영토의 방위와 직결시킨 이익선 한국 수호의 논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890년 야마가타가 이익선 논리를 국책으로 결의한 이래 당면과제가 되었던 한국병합은, 삼국간섭 직후 야마가타가 제창한 “동양의 맹주” 일본이라는 목표와 결부되어 야마가타 그룹 조슈벌육군 군부가 중심이 되어 체결한 영일동맹을 통해서 적극적인 북진 대륙정책으로 확립된 ‘제국국방방침’의 일환이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 국가의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한국을 일본 국가의 국방과 직결시킨 이익선논리는 결과적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이 인근 동아시아 대륙에서 제국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기본 논리가 되었다. 일본의 한국병합은 야마가타 그룹의 유력한 조슈벌 육군 군부가 주력한 북진대륙정책, 대륙국가 일본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의 북진대륙정책은 삼국간섭과 하문사건 직후의 열강의 간섭 위기, 그리고 러일전쟁 이후 고조된 ‘황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상유지를 원하는 구미 제국주의 열강의 강력한 견제를 경험하며 상대적으로 열강의 관심이 적은 반도 한국을 기점으로 하여 가까운 동아시아 대륙으로 적극적으로 일본 국가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에게 그것은 삼국간섭과 러일전쟁 이후 고조된 ‘황화론’을 경험하며 열강에 대한 약세와 그로 인한 협조의 필요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유로 구미 열강의 견제를 무마하기 위하여 구미협조주의 외교를 적극화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여 한국병합을 이루어 낸, 절실하고 적극적인 것이었다.⁴⁾ 또한 일본을 맹주로 한 아시아의 연대를 정치적으로 강력히 표명하기 시작한 동아시아 문화에 정당 정치의 주요 인물이 된 고노 히로나카(河野廣中), 이누카이 쓰요시(犬飼毅), 그리고 키요우라 게이고(清浦圭吾),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등과 같은 대표적인 관료의 일부, 우쓰노미야 타로(宇都宮太郎)와 같은 군인이 참가하고(스벤 사아리 2008,

4) 전상숙(2006) 참조.

137) 있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야마가타가 제창한 '동아의 맹주' 일본론은 민간에서 인종 인식과 함께 확산되고 있던 아시아의 맹주 아시아주의와 일본 국가의 발전을 공통분모로 하여 결합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야마가타가 1914년 백인과 유색인의 경쟁을 말하며 세계대전 후 경쟁이 급격히 되어 백인이 힘을 합쳐 유색인을 적대시하게 될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야마가타, 『對支政策意見書』別紙, 大山梓 1966, 340-345)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IV. 일본 대륙국가화의 '교두보', 한반도

한국을 '주권선' 일본과 직결시킨 야마가타의 대륙진출 구상의 출발점은, 한국 병합을 단행함으로써 북진대륙정책을 현재화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대륙진출과 이를 위한 한국 지배의 필요라고 하는 국가적 요구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서로 다른 두 입장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청일전쟁으로부터 하문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륙정책은 '복수남진' 정책이었다. 이때 한국은 '복수'의 차원에서 섬나라 일본이 인접한 반도 한국에 안정된 거점을 마련하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국 전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었다. 삼국간섭 이후 야마가타가 러시아에 대해 북위 38도선 분할을 제안한 것은(모리야마 1987, 120; 고바야시 1996, 28) 그러한 대륙정책의 입장에서였다. 그러나 하문사건 이후 열강의 극동의 현병과 같은 처우에 또 다시 굴욕을 경험하며 실질적인 국가발전을 모색하며 영일동맹을 맺어 육군이 전환시킨 북진대륙정책에서 한국은 일본이 러일전쟁을 치르면서라도 전토를 확보해야 하는 일차적인 정책목표가 되었다. 러일개전 당시 '만한교환론'이 운운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야마가타의 이익선 논리는 청일전쟁 이후 높아진 군벌의 발언력을 배경으로 적극적인 대륙정책으로 전개되었다. 그것은 섬나라 일본의 해군력을 활용한 북수남진·대륙정책으로 청일전쟁 당시까지 일지된 것이었다. 그러나 삼국간섭의 경험에 더하여 하문사건은 일본의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대륙정책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그것은 러시아와의 결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영일동맹 체결을 둘러싸고, 대러교전을 염두에 둔 동맹추진 측과 러시아와의 전쟁은 피하자는 입장으로 대립하였다. 결국 동맹체결 세력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그것은 야마가타 그룹 조슈벌 육군 군부가 이끄는 내각과 군부가 하나가 되어 관철시킨 것으로, 대륙에서 전개된 청일전쟁 이후 특히 위세가 높아진 육군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었다. 영일동맹 체결 이후 일본의 대륙정책은 일본 육군이 중심이 되어 종래의 '남진'을 유보하고 '북진' 곧 한국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하여 중국 만주방면으로 진출할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었다(이노우에 1975, 59-60; 전상숙 2006, 123). 그러한 적극적인 북진대륙정책은 러일전쟁의 승리로 공고히 되어 1907년 '제국국방방침'에서 국책으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영일동맹 체결시와 마찬가지로 내각과 그 북진대륙정책의 추진자인 육군의 이해와 입장이 일치하여 한국병합을 단행하였다. 한국병합을 일치단결하여 달성한 조슈벌 일본 육군 중심의 북진대륙정책에서 한국은 섬나라 일본에 대한 '반도'라고 하는 지리적 특성상 일견 섬나라 일본과 대륙을 연결하는 단순한 연륙교(連陸橋)와 같은 존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 군사력의 열세가 인정되던 당시 전쟁을 무릅쓰고 한국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 한국이 매우 중요한 전략적,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북진대륙정책의 거점, 교두보로 여겨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차이는 '주권선'(일본)과 직결시킨 '이익선'(한국)의 불안정성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병합하

는 때까지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발전을 위한 방위라는 군사적 견지에서 '주권선' 일본과 직결시킨 '이익선' 한국의 병합이 완료됨으로써 현재화된 북진대륙정책에서 그 차이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이었다. 그 차이는 병합 후 한국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곧 한국 식민지 지배정책과 그에 따른 지배 체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식민지 조선의 지배와 직결된 중요한 것이었다. 여기에 한국병합의 전권을 위임받아 한국통감으로 테라우치 육군대신이 부임하여 병합을 단행하고, 초대 조선총독이 되어 조선총독정치의 기본 틀을 확립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지하듯이 테라우치는 야마가타에서 카츠라로 이어지는 조슈벌의 중심인물이었다. 테라우치의 일련의 행적은 일본이 대륙진출을 적극화하면서 한국을 '이익선'으로 규정하고 이를 일본의 '주권선'과 직결시켜서 병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야마가타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조슈벌 육군 군부의 대륙정책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육군 조슈벌의 인적 계보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천황에 직예한 군부의 군통수권 논리와 의식이 '이익선' 한국에 대해서 관철되는 방식을 보면 분명해진다. 1904년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서를 체결하여 고문정치를 단행하면서 육군 군부는 조슈벌 육군중장 하세가와(長谷川好道)를 한국주차군사령관에 임명하고, 한국주차군사령관이 천황에 직예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일본에서 군권이 천황에 직예하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군권이 내각이 아니라 군부를 중심으로 하여 관통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한국통감부 설치시 무관 통감을 예상했던 군부는 뜻밖에 문관 이토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여 문관통감 이토 안과 이토의 조선주차군 지휘권 요구를 받아들여 칙령으로 관철되었다. 그것은 육군부의 북진대륙정책이라는 전략적 구상 속에서 결정된 것이었다. 당시 이토의 조선주차군 지휘권 요구를

전격 수용한 테라우치는, 군지휘권은 “법문”이 아니라 “실행상의 통수권 시행 능력 여하”가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토에게 임기(臨機)군대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으로 여겼다(오오에 1992, 26). 이러한 테라우치의 태도는 이토 한국통감이 조선의병투쟁 진압의 역부족으로 주차군 증강을 요구하자 현병대를 증핵으로 투입 시켜서 한국통감의 통수권 사용을 제한하는 식으로 타나났다. 현병대의 일부를 파견함으로써 육군대신의 군통수권이 한국에서도 실행되도록 한 것이다. 문관 이토에게 한국주차군에 대한 지휘권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한국 지배의 안정화에 일본 군부의 영향력이 행사되도록 한 것이었다(전상숙 2006, 134-138). 이와 같이 테라우치가 군부의 통수권을 한국에서까지 ‘실행상의 통수권 시행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본의 국방과 직결시킨 ‘이익선’ 한국 지배의 안정성을 군부가 확보하여 북진대륙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였다(전상숙 2009, 17-18).

군통수권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군부가 한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육군대신이 한국통감과 조선총독을 겸하며 조선에 체류했던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물론 그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막말이래 형성된 일본에 대한 한국의 국방상의 중요성에 있다고 하겠다. 1890년 야마가타의 한국에 대한 이익선 논리 또한 그러한 입장에서 제기된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거기에는 명치 말 이래 궁중·육군·추밀원·귀족원·문관 관료 등에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던 야마가타그룹(키부 1998, 27-28) 내에서 조슈 육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진대륙정책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야마가타 이래 조슈 육군벌의 계보를 이은 카츠라와 테라우치를 중심으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테라우치에 대한 카츠라의 견제와 그와 연동된 일본 국내 정치세력 간의 조선 지배정책, 대륙정책 상의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테라우치는 러일전쟁 이후 육군을 조수인을 중심으로 “테라우치체제”화하며 장악해갔다.⁵⁾ 이에 비해서 일찍이 입각하여 군정가로서 경력을 쌓고있던 카츠라의 육군에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일찍 후퇴하였다(키타오카 1978, 6, 62-64). 이토와 같은 대정치가가 되고 싶은 정치적 야망을 품고 있던 카츠라는 테라우치를 육군대신으로 입각시켰지만 러일전쟁 이후 급부상하는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야마가타가 육군을 장악한 테라우치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면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대권 이양의 야망이 좌절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카츠라는 한국 병합에 뜻을 같이한 테라우치가 조선총독부체제 정비 후 육군대신으로 귀임하려 하자 조선지배 안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육군대신을 사임하더라도 조선총독으로 유임해 조선지배를 안정시켜줄 것을 당부하였다(하라일기 1911. 6. 1; 고바야시 1996, 192, 290; 마쓰다 2005, 103). 이는 곧 카츠라가 테라우치를 같은 야마가타 그룹의 일원이자 조슈 육군벌의 계승자로서 누구보다 ‘이익선’ 한국의 의미를 잘 알고 있던 것을 활용해 일본 중앙 정계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때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전상숙 2009, 19).

그리고 카츠라는 대정대모크라시를 배경으로 커가고 있던 군부에 대한 반감과 정당정치 의 약진을 이용하여 ‘대정정변’을 이면에서 책동하며 신당(입헌동지회)을 결성하였다. 사실 카츠라는 야마가타의 비호 아래 그의 뒤를 잇는 군정가로 성장했지만 대륙정책에서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다. 야마가타는 러시아의 위협을 국방의 견지에서 신중하게 고려하여 만주경영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반해서 카츠라는 만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대륙정책을 직면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적극 추진하는 입장에서 러시아와의 전쟁도 불사하는 적극적인 북진대륙정책을 지

5) 러일전쟁 이후 일본 육군의 테라우치체제화에 대해서는 전상숙(2006), pp.125-131 참조.

향하였다. 카츠라의 지향은 이미 제2차 카츠라내각 시기 군사적 인 목적에만 국한하지 않는 철도광역화정책을 결의한 가운데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한 대륙정책에 대한 차이는, 테라우치의 부상을 경계한 카츠라가 대륙정책의 지향을 같이 하는 정당 정치세력과 함께 신당을 결성하고 육해군대신문관계 채용을 결의하면서 현재화되었다. 카츠라는 대만총독부 체제개혁에 성공한 고토와 함께 적극적 대륙정책을 기속으로 하는 체제전환을 꾀하였다. 그는 데모크라시 풍조의 정세를 배경으로 정당세력과 함께 변별중심의 국내 제도를 개혁하면서 대륙정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추진하여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 것이다(고바야시 1996, 277-83).

이와 같이 카츠라는 야마가타 그룹으로 이탈하였고, 그러한 일본 대륙정책의 입장 차이는 곧 식민지경영에 대한 입장의 차이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대륙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는 국내 정세변화와 연동되어 야마가타-테라우치 대 카츠라-고토의 대립을 결정적으로 만들었다(고바야시 1996, 43, 139, 188-216). 이러한 차이를 식민지 조선 경영(지배)의 측면에서 보면, 일본의 대륙국가화와 대륙국가 일본 국가 방위의 차원에서 조선 지배의 안정화를 우선시 하고 일본 국가의 일부가 된 조선영토를 거점으로 하여 북진대륙정책을 추진하려는 '조선교두보관'과 만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사 대륙정책을 일본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우선시하여 만철 중심의 식민지경영을 추구하는 '조선연육교관'이 대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전상숙 2009, 20).

한국 병합 당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했다"고 하지 않고 "조선병합"이라던가 "일한병합"이라 하여 '병합(併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실상 한국병합을 결의한 7월 6일 각의결정원안 작성시 외무성 정무국장이었다 구라치(倉知識吉)에 의하면 '병합'이란 용어는 "한국이 완전히 廢滅하여 帝國 영토의 일부가 된다는 의미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 어조가 너무 과격하지 않

은 문자를 택하고자 고심"하여 "당시 아직 일반에 사용되지 않던 문자를 선택"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구라치 1939, 11-12). 일본 육군 요슈 군벌이 중심이 되어 단행한 한국의 병합은 일본이 단순히 제국주의적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민지화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일본 국가화, 대륙국가 일본으로 하여 일본이 대륙 국가가 되어 북쪽 대륙으로 확장해 가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 국가의 발전과 이를 위한 한국, 대륙으로 연결된 육지를 영유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대륙정책의 측면에서도 궁극적으로 중국 본토로 이권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테라우치-야마가타 역시 카츠라와 같이 철도광역화정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테라우치가 제국군대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장춘-길림 철도부설계획을 한국 북부와 연결시킨 것은 그러한 입장에서였다. 그러나 그러한 궁극적인 대륙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일차적으로 중요시한 한국 병합과 그에 따른 지배의 방식을 두고 북진대륙정책의 추진방식과 우선순위에 차이가 형성된 것이었다.

테라우치가 한국통감으로 부임해 직면한 한국의 상황은 이토 통감의 주차군 증강 요구시 헌병을 파견해 영향력을 행사할 때 예기치 못했던 정도로 난감하였다. 그것은 테라우치가 병합을 달성해 소임을 다했다고 여겨 조선총독직 사의를 밝힐 정도였다(마쓰다 2005, 102-103). 일본의 조선지배 최고 통치권자의 눈에 조선의 상황은 이토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지배방침을 접어야 할만큼, 그리고 테라우치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개입되기를 원치 않을 만큼 불안정하여 난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국내 정치의 역학관계로 유입하게된 조선총독 테라우치는 그를 유입케한 카츠라의 명분과 같이 조선지배의 안정화에 최우선순위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대륙국가 일본의 주권방위, '국방'과 직결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테라우치 조선총독에게 가

장 절실한 것은 조선의 치안을 확보하여 조선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정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테라우치는 병합으로 한국이 지배권 안에 들어와 더 이상 국제적인 쟁점도 되지 않으므로 만주경영에 주력하여 단지 반도 조선을 섬나라 일본과 만주를 연결하는 연육교와 같이 취급하는 일본 정부의 중앙집권적 대륙철도광역화정책과 같은 대륙정책 관리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조선지배의 안정성을 우선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선총독에게 필요한 것은 지배의 안정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가 일본 정계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이 일본에서는 데모크라시 풍조의 확산을 배경으로 대정정변으로 사이온지내각을 도각시킨 군벌에 대해 비난이 고조되는 한편으로 우에하라(上原勇作)의 육군대신 취임을 계기로 형성된 우에하라군벌이 죠슈벌, 단적으로는 테라우치군벌을 교체하는 등(마츠시타 1967, 98-99), 1910년 병합당시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계가 움직이고 있어서 죠슈육군벌의 복진대륙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형편이 아니었다. 일본 정계의 일선에서 물러나 테라우치가 조선총독으로 유임하고 있던 당시 일본은 대정데모크라시기 민중운동의 고양에 힘입어 정당세력이 급속히 대두하는데 반해서 육군 군부가 대정정변으로 안정적이던 계원(桂園)체제를 해체한 주적으로 간주되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후일을 기대하는 동료들의 권고를 받으며 테라우치는 조선지배의 안정화를 위한 정치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경성일보 1911. 6.4 사실; 야마모토 1984, 587; 아카기 1911, 24). 일본의 정계는 군벌 카츠라가 정당세력과 제휴하여 정당을 결성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군부의 발언권이 쇠퇴하고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미 병합한 조선지배의 안정성과 같은 문제에 굳이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아카시(明石元二郎) 조선주차헌병대 사령관 겸 조선총독부 경부총장이 테라우치의 유임을 적극 권유

할 정도였다(야마모토 1984, pp.6-28, p.590).

산업이 낙후한 조선의 현실에서 조선총독부의 재정독립에 철도는 운임수입으로 세입 보충을 기대할 수 있는 유력한 재원이자 재정독립에 필요한 유력한 조선개발 수단이었다(야마모토 1984, 70; 고바야시 1996, 195, 206-207). 테라우치의 조선 치안질서 확립의 필요에 대한 위기의식과 해결 의지는 한국병합으로부터 조선총독부 체제를 구축하는 실무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테라우치가 카츠라의 철도광역화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조선의 치안질서 확보와 재정독립을 우선시하여 일원적 철도광역화정책을 수용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요인이었다. 테라우치는 야마가타의 '주권선·이익선'론에 입각한 일본 국가의 발전, 일본의 대륙국가화라는 입장에서 국방의 차원에 입각해 조선지배의 안정성을 중시한 '조선교두보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병합된 한국, 조선은 일본 육군 조슈 군부의 북진대륙정책의 교두보이고, 테라우치는 그 북진대륙정책의 초석을 정비하는 주요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전상숙 2009, 21). 테라우치가 구축한 조선총독체제는 일본 육군 조슈 군벌의 북진대륙정책의 교두보로써 구축되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세계 자본주의체제가 증공업을 산업적 기반으로 하는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는 시기에 시작된 일본의 근대화는, 영·미 중심의 선발 산업국가에 의존하는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국제체제의 현상유지를 원하는 구미 제국주의 열강의 서구중심주의적 견해를 수반하여, 일본의 러일전쟁 승리 이후 일본에 대한 위기감 '황화론'의 확산을 가져왔다. 일본이 근대적 국내 체제의 정비하고 국가이익·국력의 관점에서 일

본 국가의 발전을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피하기 시작하던 시점에 등장하여 확산된 황화론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외교적 협조주의의 강화와 함께 역설적으로 북진대륙정책의 적극화를 수반하였다.

구미 열강의 견제에 대한 일본 정부 그러한 대응 양식은 상호 모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황화론과 구미 열강의 견제는 일본의 국가적 성장의 필요와 서양에 대한 동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황화론'과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으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백화'를 말하며 일본을 맹주로 하는 아시아의 연대를 주창하며 '아시아주의'적 사상이 확산되었고, 일본이 대륙정책을 종래의 해군 중심의 복수남진으로부터 육군 중심의 '북진대륙정책'으로 전환하여 한국의 '병합'에 박차를 가하는 추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일본 국가의 발전이라는 공통된 관심과 지향을 갖고 있던 외교적 구미협조주의와 육군의 북진대륙정책은, '일선동조'론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육군 요슈빌을 중심으로 단행된 한국 병합을 통해서 아시아주의와 일본의 군국주의적 제국주의가 습합될 수 있는 단초적인 모습을 드러내었다.

일본의 국가적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대륙진출과 한국지배의 필요를 역설하며 한국을 주권선 일본과 직결시킨 야마가타의 대륙진출 구상은 한국병합을 통해서 적극적인 북진대륙정책으로 현재화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발전을 위한 방위라고 하는 군사적 견지에서 주권선 일본과 직결시킨 이익선 한국의 병합은 북진대륙정책의 차원에서 내재되어 있던 미묘한 대륙경영 방식의 차이를 표출하였다. 그 차이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병합한 한국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곧 식민지 조선총독부 지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조선지배와 직결된 중요한 것이었다.

여기서 한국병합의 전권을 갖고 한국통감으로 부임하여 병합

을 단행한 육군 대신 테라우치가 초대 조선총독이 되어 조선총독 정치의 기본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테라우치는 야마가타의 이익선론에 입각하여 단지 일본 국가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북진대륙정책이 아니라, 일본의 대륙국가화 곧 조선지배의 안정성을 확립하여 일본의 일부로 하고 안정된 조선 곧 확보된 대륙국가 일본으로써의 조선을 기반으로 하여 북진대륙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조선총독 테라우치의 대륙경영의 입장은 단지 조선을 대륙으로 나아가는 '연육교'와 같은 존재로 보아 병합으로 조선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조선 자체의 안정적 발전과 같은 것에는 무심하고 만철중심의 대륙경영에 관심을 집중했던 '조선연육교관'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는, 조선을 일본의 일부로써 북진대륙정책의 '교두보'로 중시하여 지배의 안정성을 위한 재정독립 등 자체적인 안정적 개발을 이루어 이에 기초하여 북진대륙정책을 추진하고자 한 '조선교두보관'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테라우치는 그 북진대륙정책의 초석을 정비하는 주요 임무를 담당할 육군 요수 군벌의 후계자였다. 여기서 병합된 한국, 조선은 일본 육군 요수 군벌의 북진대륙정책의 교두보로써 설정된 것이었다. 테라우치가 구축한 조선총독체제는 일본 육군벌 북진대륙정책의 교두보로 구축된 것으로, 조선지배의 전권을 갖고 있는 조선총독의 권한은 그러한 조선의 입지가 일본 국내의 정세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도 같았다.

참고문헌

-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 1920. 『朝鮮併合之裏面』. 東京: 中外新論社.
- 고바야시 미치히코(小林道彦). 1996. 『日本の大陸政策 1895-1914』. 東京: 南窓社.
- 구라치 테츠요시(倉知鐵吉). 1939. 『倉知鐵吉氏連 韓國併合ノ経緯』. 東京: 外務省調査部第四課.
- 권희영. 2006. "20세기 초 러시아 극동에서의 황화론." 『정신문화연구』 통권103호.
- 나카츠카 아키라(中塚明). 1977. 『近代日本と朝鮮』. 東京: 三省堂.
- _____. 1993. 『近代日本の朝鮮認識』. 東京: 研文出版.
- 다카쿠라 테츠이치(高倉徹一) 編. 1981. 『田中義一傳記』. 東京: 原書房.
-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奉). 1917. 『公府桂太郎傳』. 東京: 故桂公爵記念事業會.
- 도키오 도쿠니(澤尾東邦). 1926. 『韓國併合史』. 京城: 朝鮮及滿洲社.
- 마스미 쥬노스케(舟津準之輔). 1992. 『일본정치사 II』. 이경의 역. 서울: 향설출판사.
- 마쓰다 도시히코. 2005. "일본 육군의 중국대륙침략정책과 조선 (1910-1915)." 권태익 외. 『한국 근대사회와 문화』 II.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마츠시타 요시오(松下方南a). 1967. 『日本軍閥の興亡 1』. 東京: 人物往來社.
- _____. b. 1967. 『日本軍閥の興亡 2』. 東京: 人物往來社.
- 모리야마 시게노리(森山茂徳). 1985. 『日韓併合の國際關係』. 近代日本研究會. 『日本外交の危機認識』. 東京: 山川出版社.
- _____. 1987. 『近代日韓關係史研究: 朝鮮植民地化と國際關係』. 東京: 東京大學 出版會.
- _____. 1992. 『日韓關係』. 東京: 吉川弘文館.
- 스벤 사아러(2008). "국제관계의 변용과 내셔널 아이덴티티 형성." 『한국문화』 41.
- 야카기 카루도(赤木格堂). 1911. 『朝鮮總督專任論』. 『日本及日本人』第560號.

-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1890. 3. 3. 「外交政略論」. 大山梓 編. 1996. 『山縣有朋意見書』. 東京: 原書房.
- _____. 1890. 12. 6. 「帝國の國是に就ての演說」. 大山梓 編. 1996. 『山縣有朋意見書』. 東京: 原書房.
- _____. 1893. 10. 「軍備意見書」. 大山梓 編. 1996. 『山縣有朋意見書』. 東京: 原書房.
- _____. 1895. 4. 15. 「軍備擴充意見書」. 大山梓 編. 1996. 『山縣有朋意見書』. 東京: 原書房.
- _____. 1909. 4. 「第二對清政策」. 大山梓 編. 1966. 『山縣有朋意見書』. 東京: 原書房.
- _____. 1914. 8. 「對支政策意見書」別紙. 大山梓 編. 1966. 『山縣有朋意見書』. 東京: 原書房.
- 야마모토 시로(山本四郎) 編. 1980. 『寺内正毅日記-1900~1918-』. 京都: 京都女子大學.
- _____. 編. 1984. 『寺内正毅關係文書-首相以前』. 京都: 京都女子大學.
- 야마베 겐타로(山邊健太郎). 1971. 『日本 統治下の 朝鮮』. 東京: 岩波書店.
- 오오에 시노부(大江志乃夫). 1992. 「植民地戰爭と總督府の成立」.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2』. 東京: 岩波書店.
- 오카 요시타케(岡義武). 1996. 『근대 일본 정치사』. 장인성 옮김. 서울: 소하.
- 오쿠마 에이지로(小條英二). 1995. 『單一民族神話の基源』. 東京: 新曜社.
- 外務省 編. 1965.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上. 東京: 原書房.
- 운노 후쿠주(海野福壽). 2004. 『伊藤博文と韓國併合』. 東京: 青木書店.
- 유기식(1997). 「캘리포니아에서의 배일운동의 확대」 『경북사학』제20집.
-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清). 1975. 『日本の軍國主義 III』. 東京: 現代評論社.
- 이리에 아키라(入江昭). 1993. 『일본의 외교』. 서울: 푸른산.
- 이재문. 1998. 「황화론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에서 가지는 함의」 한 국사학회. 『사회학대회논문집』.
- 日本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部 編. 1967. 『戰史叢書大本營陸軍部 1』. 東京: 朝雲新聞社.
- 전복희. 1996.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서울: 한울.
- 전상숙. 2006. 「러일전쟁 전후 일본의 대륙정책과 테라우치(寺内正毅)」 『사회와역사』통권 제71집.

- _____. 2009. "조선총독정치체제와 관료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 31집1호.
- 朝鮮總督府. 1912. 『朝鮮總督府施政年報』. 京城: 朝鮮總督府.
- 최문형. 2004. 『국제관계로 본 러일전쟁과 일본의 한국병합』. 서울: 지식산업사.
- 쿠로다 코시로(黒田甲子郎). 1920. 『元帥寺内伯爵傳』. 東京: 元帥寺内伯爵傳記編纂所.
- 키타오카 신이치(北岡申一). 1978. 『日本陸軍と大陸政策』.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키부 요시나리(季武嘉也). 1998. 『大正期の政治構造』. 東京: 吉川弘文館.
- 하라케이이치로(原奎一郎) 編. 1965. 『原敬日記』第3卷. 東京: 福村出版.
- 韓國駐劄軍參謀部. 1906. 3. 『問道二關スル調査概要』.
- Charles E. Neu. 1967. *An Uncertain Friendship-Theodore Roosevelt and Japan 1906-1909*.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Peter Daus. 1995. *The Abacus and the Sword :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Japan'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privation of Korean Sovereignty

JEON Sang Sook

The modernization of Japan was accompanied by Western containment. The West's fear of Japan after Japan won the Russo-Japanese war, manifested as 'Yellow Peril.' In response, Imperial Japan tried to improve its foreign relationship with Western countries. At the same time, Japan changed its continental policy to strengthen its national power. The Yellow Peril and Western countries' policy of containment made the Japanese government recognize its identity as the Orient. The thought of 'Asianism'(亞細亞主義), which was based on an idea of racial hierarchies like the West's idea of Yellow Peril was spread. The key concept of Asianism was that Japan should lead the Orient as the leader. Therefore, in Japan's new continental policy, the first step was to accomplish the annexation of Korea.

The basic plan to annex Korea was designed by General Yamagata in the interests of Japan's national development. The concept of 'interest line'(利益線), which included Korea was seen integral to the sovereignty of Japan. It was based on a military point of view, seeing national defense as a key point for development. The view was shared among Japanese politicians. However, Japan's continental policy contained two subtle differences in management plans. The differences were whether the political autonomy of Governor-General should be secured or not. This was closely related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Korea. The differences were very important in colonial governing of Korea as they were closely related to the issues of how to rule annex Korea.

Key Words : Russo-Japanese War, Asianism, Japan's Continental Policy,
Annexation of Korea, Yellow Peril